

2018

Report

of Trend

2018

정부 및 수도권 지자체

규제완화 정책

동향보고

2018.08. part2 제 104 호

Contents

I . 정부 추진동향

1. 수도권 역차별 "vs 지역 불균형... 지역 의원들 국회서 '대리전' 3
2. 규제프리존 전국으로 확대...추경호, '규제프리 3 법' 절충안 발의 4
3. 송재호 균형발전위원장 “청와대 지방분권 비서관, 수석급 돼야” 5
4. 균형위,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부활 6
5. 경제살리기에 속타는 黨·靑... `규제프리존법` 野와 손잡아 7
6. 혁신도시 시즌 2 성공 정착 노력 9
7. 산업·중기부 “규제프리존법 통과해도 수도권 규제 유지” 11
8. 이제 학교 근처에 모텔 건축허용? ‘규제프리존법’ 졸속통과 우려 12
9. 규제완화 위한 지역특구법, 이달 처리 어려워져 13

II . 수도권 추진동향

1. '거미줄 규제'에 신규투자 포기... '유턴기업' 稅감면도 수도권만 제외 14
2. 해외기업도 손든 규제의 벽... 수도권 일자리 1 만 2 천개 증발15
3. 비수도권 눈치보다가 '경제회생' 놓친다 17
4. 규제 프리존에 경제자유구역 포함을 18

III . 비수도권 (지역) 추진동향

1. 김영록 전남지사, 강원·호남·충청권인 '강호축' 국가계획 반영 서명 19
2. 광주-대구 잇는 '달빛내륙철도' 사업 속도 낸다 20
3. 국가균형발전 위해 '강호축' 구축 역량 모은다 21

1. 수도권 역차별 "vs 지역 불균형... 지역 의원들 국회서 '대리전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기사	보도일자	2018.08.16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한국경제

02

주요내용

■ 발의된 관련법만 20 건 육박

- 수도권 규제 완화에 가장 큰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비수도권 정치인들
 - 이들은 규제 완화가 수도권 쏠림 현상을 가속화해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
 - 반면 서울·경기·인천 지역 정치인들은 수도권 규제 때문에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항변

20 대 국회에서 발의된 수도권 규제 관련 법안

규제강화	규제 완화
과밀부담금을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인천에도 부과 (변재일, 민주당 충북 청원)	수도권 일부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규제완화 (정성호, 민주당 경기 양주)
과밀부담금을 서울시에 나누어주지 말고 전액국고 귀속 (박덕흠, 한국당 충북 옥천)	경기도의 군단위 지역은 수도권범위에서 제외 (정유섭, 한국당 인천부평갑)
수도권 과밀억제권 내 공업지역 총면적 증가 금지 (이현승, 한국당 부산 부산진을)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송석준, 한국당, 경기 이천)

- 20 대 국회 들어서만 수도권 규제를 강화 혹은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20 건 가까이 발의
 - 여야 가릴 것 없이 비수도권 의원들은 규제 강화를, 수도권 의원들은 규제 완화를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음
- 규제 강화 법안은 충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주로 발의
 - 수도권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충북은 수도권 규제의 수혜를 상대적으로 많이 받은 지역으로 꼽힘
-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충북 청원) 이 대표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 수도권 과밀부담금을 서울뿐 아니라 경기·인천에서도 거둬야 한다는 내용
 - 표준건축비의 5~10% 인 과밀부담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만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은 서울만 대상
 - 대상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말고 과밀억제권역 전체에 부과하도록 법에 명시
-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 (충북 옥천)
 - 과밀부담금을 서울시에 나눠주지 말고 전액 국고로 귀속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
 - 지금은 부담금의 50% 는 국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로, 나머지 절반은 서울시
- 이현승 한국당 의원 (부산 부산진을) 은 수도권 과밀억제권 내 공업지역 총면적이 증가하는 걸 금지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
-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법안도 다수 발의
 - 휴전선과 인접한 데다 규제까지 받아 상대적으로 낙후한 경기 북부의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많음
- 경기 양주가 지역구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대표적
 - 이 안은 접경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을 '정비발전지구' 로 지정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
 - 경기 가평이 지역구인 김영우 한국당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
- 정유섭 한국당 의원 (인천 부평갑) 은 수도권 범위에서 경기도의 군 단위 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을 제외하자는 법안을 발의
- 송석준 한국당 의원 (경기 이천) 은 수도권 규제의 근거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아예 폐지하자는 법안

2. 규제프리존 전국으로 확대...추경호, '규제프리 3법' 절충안 발의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기사	보도일자	2018.08.16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머니투데이

02

주요내용

■ 興 샌드박스법 - 野 규제프리존법 절충안...꼭 막힌 규제개혁법안 통과 단초 될까

- 자유한국당의 규제프리존법과 더불어민주당의 규제샌드박스법 병합 심의가 국회에서 거론되는 가운데 이를 보완한 '규제프리 3법' 이 발의
 - 사실상 '규제혁신' 이라는 목적은 같지만, 각론에서 갈리던 두 법의 장점을 합친 절충안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16 일 '규제프리 3법' 을 국회에 제출
 - 산업·정보통신융합 분야의 규제 특례 적용 지역 (규제프리존) 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샌드박스법 내 독소조항으로 꼽혀 온 '무과실 책임제' 를 배제한 것이 골자
- 규제프리 3법
 - 지역전략산업 지원을 위해 맞춤형 규제완화 특례 신설을 반영하는 내용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지역특구법) 전부개정법률안'
 - 인공지능 (AI)·빅데이터·사물인터넷 (IoT) 등을 활용한 산업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정보통신융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들 3법의 뼈대는 한국당이 기존에 당론으로 제출했던 규제프리존법
- 한국당 법안
 - 각종 규제특례와 네거티브 규제방식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빼고는 원칙적으로 허용)
 - 기업실증특례 (허가 근거 법령 미비 시 안전성 확보 전제로 새로운 서비스·제품 출시 허용) 내용은 살림
 - 산업융합·정보통신융합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 프리존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 어디서든 규제 특례를 적용
- 한국당이 지적했던 규제샌드박스법의 독소조항들은 덜어냄
 - 기업실증특례의 유효기간 삭제, 샌드박스법 내 '임시 허가제도' 는 규프법의 기업실증특례와 취지는 같지만,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제한
 -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업을 접을 수 밖에 없는 만큼,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유효기간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 추 의원의 주장
- 샌드박스법에 포함된 '무과실 책임제' 도 제외
 - 무과실 배상책임제는 기업이 규제 샌드박스 속에서 혁신기술·상품·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생기면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무조건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
- 한국당은 규제혁신 및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TF(태스크포스) 를 진행하면서 이 항목에 대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한 바 있음 : 과도한 책임 부여로 오히려 신산업 도전 의지를 꺾는다는 이유
- 추 의원
 - 여당이 규제프리존법을 본따 만들었다고 하는 샌드박스법안의 경우 과감한 규제혁파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음
 - 규제프리 3법이 통과되면 그동안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법적 공백 문제가 해결되고 각종 특례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게 돼 신산업 추진에 날개가 달릴 것

3. 송재호 균형발전위원장 “청와대 지방분권 비서관, 수석급 돼야”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기사	보도일자	2018.08.16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국제신문

02

주요내용

■ 靑 지방분권 관련 비서관실 축소, 취임 1 주년 공개석상서 지적

- 청와대가 비서실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지방분권 조직을 축소한 것과 관련해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16 일 (청와대에) 지방분권과 관련된 수석비서관 정도가 있어야 지방분권을 총괄할 수 있다며 청와대 지방분권 관련 비서관실을 수석실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
- 자치분권위원회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이끌어가는 균형발전위원회 수장이 공개석상에서 청와대의 지방조직 축소 문제에 대해 지적한 것은 이례적
- 취임 1 주년을 맞아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청와대 지역기자단과 간담회를 한 송 위원장
 - 균형발전, 자치분권과 관련된 청와대 수석 정도가 있어야 지역정책을 총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제안도 한 적이 있음
 - 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서 떼어놓으면 안 되는 존재라고 봄
 - 두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서 논의하는 구조가 이치에 맞다고 밝힘
 - 다만 이것이 비서관급이 아니라 수석급이 돼야 한다는 것인데, 청와대 조직 확대 문제는 청와대가 일 중심·조직 축소 중심으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그 부분까지는 달성하지 못했음
 - 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을 통합한 자치발전비서관을 수석비서관이라고 여기고 우리가 힘을 모아줘야 함
 - 자치분권 균형발전 전략회의 같은 것을 만들어 비서관이 자치분권위원장, 균형발전위원장과 함께 전략회의를 열면서 지방분권정책을 공고하게 협력하도록 의견을 모으는 중
- 청와대 조직개편 이전에는 청와대 비서실 균형발전비서관은 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비서관은 자치분권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체제로 운영
- 물론 당시에 균형발전비서관은 정책실 아래에, 자치분권비서관은 정무수석실 아래에 각각 두고 있어 양 비서관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기 위해서는 자치분권·균형발전 수석실을 두고 여기에 이들 비서관실을 뒤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음

4. 균형위,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부활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기사	보도일자	2018.08.16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대구신문

02

주요내용

■ 14년 동안 예산 한 푼 없이 사문화(死文化)됐던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계획계약)'가 부활될 전망

-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는 지역이 필요한 사업을 기획하고, 중앙정부와 협약을 통해 다부처에서 다년간 포괄보조하는 연차사업 방식
-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는 지역발전 사업에 지역주도 및 다부처 패키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 3월 균특법 개정을 거쳐 대구·경북 등 전국 14개 광역단체가 제안하는 '지역별 성장 거점군 및 혁신산업(안)'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 우선 지원과 함께 균형위 역할 강화에 나설 방침
- 송재호 위원장은 16일 한국프레스센터(19층)
 - 해당 제도는 지난 2004년 균특법 제정 당시 도입됐지만 추진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실적이 제로(ZERO)
 - 가장 걸림돌이었던 범부처 패키지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균특법 시행령을 개정, 제도 운영체계를 현행 산업부에서 균형위 주도로 개편 추진하면서 내년 예산(안)에 시범 사업비 300억원을 반영할 예정
 - 이번 지원사업은 BC(편익비용) 값을 높이기 위한 예비 타당성조사 등 경제적 가치의 비중보다는 사회적 가치에 중점을 둬
 - 다만 R&D 과제의 경우에는 사업화로 이어지지 않고 논문 등재 등 평가 위주의 기준에 매몰되지 않도록 R&D의 주요 평가항목인 신뢰성 평가 여부 등을 점검함으로써 제품 결함 및 사업화 성공 등 후속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
- 이를 위해 균형위는 내년 시범사업 추진방안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 다음달 균특법 시행령 개정·공포,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거쳐 내년 1~2월 사이 시범사업을 공모해 5월께 정부(주관, 협조부처)과 지자체간 시범사업 협약 체결에 나설 계획
- 균형위는 내년 시범사업부터 그동안 지자체에서 일일이 국토부와 미래부, 산업부 등 해당 부처를 다니며 승인을 얻고 지원을 요구하는 번거로움 대신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계약을 맺고 실질적인 종합적인 중재지원
- 사업 선정방법은 비수도권 광역도 및 광역시 1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지자체별 2~3개 사업제출), 광역 지자체별 1개 이내에 한해 3년간 사업별로 총 150억 원 한도내 차등 지원
- 시도 사업비 매칭 비율은 각각 30~50% 이상으로 설정할 계획
- 특히 일자리 창출, 인프라 확충 및 국정과제 등 지역핵심사업으로 3년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과제의 경우 기술 개발의 사업화에 대한 성공률과 제품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확인 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공개하고 패널리티도 적용, 예산 차등제도 검토중

5. 경제살리기에 속타는 黨·靑... `규제프리존법` 野와 손잡아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기사	보도일자	2018.08.17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매일경제

02

주요내용

■ 여야가 17 일 규제프리존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규제 개혁과 민생 법안을 8 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민주당·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 채이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조찬 회동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
 - 특히 3 당 이 각각 안 을 내고 3 개 의 상 임 위 에서 따로 논의 하던 규제 개혁 법 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병합 심사하기로 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음
- 규제프리존법의 경우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별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규제프리 3 법을 병합해 산자중기위에서 심사한 후 본회의에서 처리
 -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별법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의원 시절 발의한 법안
 -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 규제프리 3 법은 추경호 한국당 의원이 각각 내놓은 법안
 - 특히 `지역전략산업 맞춤형 특례 (37 개), 일반·입지특례 (32 개)` 등 규제특례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존 규제프리존법을 복원
 - 여당 안에도 `일반·입지특례 (25 개)` 는 들어가 있지만 `지역전략산업 맞춤형 특례` 부분은 제외
- 우선 관건은 규제특구에서 규제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
 - 여당 안 : 규제 정책의 최고책임자로 국무총리를 두고, 사무조직은 중소벤처기업부 내에 설치,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지역혁신성장특구위원회를 설치해 특구 계획의 승인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중소벤처부 장관이 간사 역할을 맡아 실무를 책임지는 구조
 - 한국당 : 컨트롤타워를 중소벤처부로 해서 중소벤처부 내에 규제프리존 특위와 사무국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 위원장은 중소벤처부 장관이 맡도록 하고 있지만, 기재부 부총리가 맡는 방안도 검토 중
- 한국당은 또 여당 안과 달리 기업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을 없애고, 무과실 책임제도를 반영하지 않았음
 - 기업실증특례는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을 출시할 때 근거가 되는 법령이 없거나 현행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할 때 안전성을 전제로 허가를 내주는 것을 의미
- 민주당이 주장하는 시스템은 3 단계 해결 시스템 (신속규제확인제도 - 실증특례 - 임시허가제) 인데 여당 안에서는 임시허가제도와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을 각각 2 년으로 제한
- 한국당은 유효기간을 2 년으로 제한할 경우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
- 과실 책임제에 대해서는 여당이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
 - 무과실 배상책임제는 기업이 규제 샌드박스 속에서 혁신기술·상품·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생기면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무조건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
 - 이 같은 배상책임제가 기업에 과도한 책임을 부여하고 신산업 도전 의지를 꺾는다는 게 한국당의 판단
- 여야는 이날 규제개혁법 외에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8 월 국회 처리에 원칙적으로 합의
 - 다만 여야는 계약갱신요구권 기한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여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음
- 세계 혜택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못함

5. 경제살리기에 속타는 黨·靑... `규제프리존법` 野와 손잡아

02

주요내용

-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이나 바른미래당은 10년을, 한국당은 8년을 주장
 - 본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를 되는 방향에서 결론을 내보려고 함
- 또한 여야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하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민생경제법안 TF 에서 논의하기로 함
- 이와 함께 산업융합법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정보통신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음

6. 혁신도시 시즌 2 성공 정착 노력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기사	보도일자	2018.08.19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충북일보

02

주요내용

■ **취임 1년을 맞은 송재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성공을 자신**

- 그는 지방으로 이미 이전됐거나 이전 예정인 공공기관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혁신도시 '시즌 2'를 추진해 관심을 모으고 있음
- 현재 프랑스에서 자리 잡은 지역발전투자협약(계획계약제도)을 도입해 내년부터 지역주도형 정부 지원사업을 추진
- 그러나 최근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추진 동력이 떨어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지역민들로부터 나오고 있음

◇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로드맵은 어떠한 일정으로 추진되나?**

- 지난 2월 '비전과 전략'을 통해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라는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을 선포
- 국가균형발전의 3대 가치(분권, 포용, 혁신) 및 9개 핵심과제 등 새로운 정책도 제시
- 3월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하여 지역주도의 자립적 성장을 위한 균형발전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
- 특별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9월까지 원만하게 마무리함으로써 달라진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
- 이를 통해 지역주도혁신협의회, 균형발전상생회의 등 지역 주도의 혁신체계 구축 및 지역의 균형발전 체계를 정비
- 시도별·부문별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도 10월중으로 마무리할 예정
- 아울러 혁신도시와 관련해서는 현재 시·도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혁신도시 시즌 2'라고 할 수 있는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10월중 확정·발표할 예정

◇ **혁신도시 시즌 2,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등이 단시간에 성과를 내려면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같은 분산형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과 같은 분산형 정책 추진은 신중할 필요
- 우선은 기 추진된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정착과 내실화에 주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때문에 대선공약부터 국정과제에 이르기까지 혁신도시 시즌 2가 계속 추진되어 온 것
- 일부 지역에서 혁신도시 추가 지정 등을 원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으나 공공기관 추가이전 문제는 균형발전의 시각에서 국민적,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한 전제

6. 혁신도시 시즌 2 성공 정착 노력

02

주요내용

◇ **분권형 개헌 좌초 이후 지방분권 추진이 담보상태이고, 지방세 확대를 골자로 한 세제 개편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현 정국에서 균형발전은 어떤 전략으로 추진되는 게 바람직한지?**

-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중앙정부 주도가 아니라는 점에서부터 분권적 요소를 아우르고 있는 측면이 강함
- 개헌이 지지부진하지만 이미 국가균형발전은 헌법적 가치이자 시대적 소명인 것은 자명하고, 다만 분권형 개헌이 되면 보다 더 명확해지고 구체화될 수 있음
- 분권과 분산을 논하자면, 물론 분권이 되면 훨씬 더 지역 주도의 고른 발전이 가능하겠으나, 그렇지 않더라도 분권이 될 때까지 균형발전이 공전해서는 안됨
 - 예를 들어 지역발전투자협약이라고 명명된 계획계약제도의 경우에도 당장은 지역 주도의 제도 본격화나 체계적인 설계측면에서 부족해 보일수도 있지만, 시범사업을 통해 2019년 약 300억 원 규모의 국비를 포괄보조 방식으로 시·도비와 매칭해 지역에 투자하고, 향후 3년간 사업별로 총액 150억 원 한도 내에서 차등 지원할 예정
- 이렇게 현행 헌법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시범적으로나마 할 수 있는 것은 유연하고 적시적으로 추진하되, 국가균형발전정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 정부, 지자체, 언론, 연구기관, 대학, 지역사회 등의 충의를 모으는 과정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항구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봄

◇ **지역의 입장에서는 경제성의 딜레마에 묶여 있는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개편 혹은 면제가 요구되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 마침 지난 8일 경제부총리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 자리에서도 예타 운용 지침상 지역균형발전의 가중치를 상향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경제·사회적 여건과 변화를 반영해 20년이 다되어가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
- 또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포함하여 다양한 사회적 가치 반영을 위한 평가항목 신설을 검토 예정
- 균형위에서도 이 과정에 있어서 지역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

7. 산업·중기부 ‘규제프리존법 통과해도 수도권 규제 유지’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기사	보도일자	2018.08.23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국제신문

02

주요내용

■ 수도권 투자허용 예외 법안 아냐, 대상지역 비수도권으로 제한

-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에 규제 완화 특별구역인 ‘규제프리존’ 을 설치하면 수도권에도 동시에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관련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수도권 규제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산업부 이인호 1 차관 (23 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전체회의)
 - 규제프리존법안, 산업융합촉진법안 등은 수도권에 대규모 공장이나 투자를 허용하는 데 예외를 두는 취지의 법안이 결코 아님
- 중기부 홍종학 장관
 - 국가균형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이 법안들의 개정안에도 이미 대상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제한돼
 - 앞으로도 중기부 정책에 국가균형발전의 정신을 적극 반영
-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5 년 12 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방안’ 에서 경기도 동북부 낙후 지역 등에 대해 기업 투자 여건 개선과 입지 지원을 추진하면서 ‘규제프리존법안’ 을 내세웠는데, 이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하려고 비수도권에 던진 일종의 ‘미끼’ 로 인식
-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규제프리존법안 (이학재 의원 대표발의), 지역특구법안 (김경수, 추경호 의원 발의) 에는 대상 지역에 수도권이 제외
- 그러나 산업융합촉진법안, 정보통신융합법안에는 수도권 규제 부분이 명시되지 않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똑같이 적용되면 관련 산업이 집중된 수도권이 수혜를 누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큼
- 이와 관련, 산업융합촉진법에는 ‘수도권 제외’ 조항이 명시돼 있지 않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심사 시 ‘지역균형발전 여부’ 를 고려해 심의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게 최인호 의원의 설명
 - 하지만 산업융합촉진법안에는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규제특례 사항을 산업부 장관 소속 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했는데, 그동안 정부 각 부처는 수도권 이해관계를 대변하거나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관심이 덜한 인사들을 심의위원으로 임명, 위원회를 꾸려왔음
- 정의당
 - 정부 여당이 허물겠다는 규제 정책은 우리 사회의 실질적 권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재벌 대기업의 특권을 보장하는 내용에 불과
 - 규제 개혁에 맞서 균형발전과 공정거래를 보호하는 정치적 지킴이가 되겠다며 규제완화와 관련된 법안의 국회 통과를 반대

8. 이제 학교 근처에 모텔 건축허용 ? ‘규제프리존법’ 졸속통과 우려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기사	보도일자	2018.08.24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한겨레

02

주요내용

■ 여야 3 당 교섭단체가 오는 30 일 8 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규제완화 법안에 대한 졸속심사 우려

- 특히 특정 지역을 ‘규제프리존’ 이나 ‘규제특구’ 로 선정해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개정안들은 기존 법률과 충돌하는 지점이 많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조만간 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지역특구법) 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 년간 논의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규제프리존법) 등을 합쳐 심사할 계획
- 문제는 이들 법률이 기존 법률과 상충되는 지점이 많아 고려할 요소가 많은데도 법안 통과를 서두르고 있다는 점
- 자유한국당의 규제프리존법이 통과하면 기존 규제는 효력을 잃음
 - 예를 들어, 규제프리존 지역에는 학교가 있더라도 호텔이나 모텔을 지을 수 있음, 학교 주변에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막는 현행 관광진흥법과 부딪힘
 - 또 특정 개인을 확인할 수 없는 형태의 ‘비식별 정보’ 를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음, 이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
 - 백두대간 등 산림 지역도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되면 케이블카, 스키장 등 관광시설을 세울 수 있음
- 기재위는 규제프리존법이 다른 법과 상충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같은 해 6 월 법제사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11 개 상임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했지만 아직 의견을 받지 못하고 있음
- 김경수 경남지사가 민주당 의원 시절인 지난 3 월 발의한 지역특구법도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한다’ 는 조건을 달았지만, 지역특구에서 규제프리존법처럼 기존 법률에 구애받지 않음
 - 식품위생법 특례를 인정받으면 제조식품의 표시 기준이나 식당 영업시간 등의 제한을 받지 않음
 - 이에 대해 조효정 국회 입법조사관은 “특구 이외 영업자와 형평성 문제가 생겨 공정 거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고 우려
- 지역특구법은 국회 상임위에서 한번도 논의된 적이 없으며, 규제프리존법처럼 다른 상임위에 의견을 구했지만 의견을 못받고 있음
- 이들 법안은 지난 17 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 당 원내대표가 ‘30 일 처리’ 에 합의하며 속도가 붙음
- 하지만 이제 7 일밖에 남지 않아 충분한 논의 없이 규제완화가 이뤄질 처지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 규제프리존법으로 국민이 대기업 시제품의 생체실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했던 민주당이 전향적 자세로 나선 것은 무책임, 규제개혁법의 8 월 임시국회 처리 종단을 촉구

9. 규제완화 위한 지역특구법, 이달 처리 어려워져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기사	보도일자	2018.08.27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한겨레

02

주요내용

■ 27 일 산자위 소위서 첫 검토… “내용 많아 이해만”, 재논의 일정 잡기 어려워 30 일 본회의 처리 불투명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가 27일 규제완화를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특구법’(지역특구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법안 심사를 시작했지만, 내용만 살피는데 그침
 - 이에 따라 이달 안에 해당 법률을 처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보임
- 이날 국회 산자위 중소기업소위원회는 오후 2시부터 지역특구법 개정안 4개를 함께 병합 심사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의원 시절인 지난 3월 발의한 것과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과 자유한국당 추경호, 홍일표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것
 -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합의를 이루기 위해 이견을 다투기 보다 전체 내용을 살펴봄
- 위성곤 민주당 의원 : 여야 간 본격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안 내용, 용어, 절차 등에 대해 서로 이해하고 토론하는 정도
-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 개정안 내용이 방대해 전체 조문을 살펴보는 수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년간 논의한 규제프리존법과는 달리 산자위에서는 처음 논의해 이해가 필요
- 개정안은 기존 법률을 전부 수정하는 것이어서 조문이 100여개에 달해 검토 내용이 방대
 - 일부 쟁점도 부각
 - 홍의락 민주당 의원 : 여야 간 조문을 살펴 보면서 일부 수도권 지역 포함을 비롯해 무과실 배상책임제, 지역별 전략 산업 등에 대한 이견은 있었음
 - 아울러 산자위는 다른 상임위 소관 법률과도 충돌한 지점이 많아 각 상임위에 의견을 구했지만 아직 답변을 구하지 못한 상태
- 산자위 소위는 이날 심사를 마친 뒤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 28일에도 심사를 이어갈 계획
- 하지만 산자위의 또다른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가 28일 열릴 예정이어서 법안 심사 일정을 잡지 못했음
- 홍의락 민주당 의원 : 법안 심사를 이어가려고 했지만 다른 소위 일정으로 어렵게 되었으며, 30일 본회의까지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아 이번 회기에서 처리가 어려워 보임

1. '거미줄 규제'에 신규투자 포기... '유턴기업' 稅감면도 수도권만 제외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기사	보도일자	2018.08.16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한국경제

02

주요내용

■ 수도권 발전 막는 '36년 족쇄' 해제, 공장 신·증설 막는 수도권정비법 접경지 개발 막는 군사시설보호법, '이중삼중 규제'에 지방보다 낙후

- 수도권 규제는 1982년 제정된 핵심법안인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을 비롯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군사시설보호법’ ‘팔당특별대책지역’ 등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음
 - 정부는 수정법 등에 따라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에 대한 총허용량을 주기적으로 정하고 있음
 - 지난 4월 국토교통부가 정한 총허용량은 올해부터 2020년 말까지 544만 5000㎡
 - 3년간 수도권에 산업단지를 하나 더 지을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규모
- 수도권 일부 지역은 이 같은 규제에 묶여 있다 보니 지방보다도 낙후돼 있다는 평가
 - 인천 강화·옹진군과 경기 동북부가 대표 지역
-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5월 “수도권 규제 대상에서 강화·옹진은 제외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정책 제언집
 - 접경지역인 강화·옹진군은 수정법뿐만 아니라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규제
 - 옹진군의 개발 상황은 전남 무안, 경북 고령, 경남 고성군 등 지방에 비해서도 크게 뒤떨어진다고 지적
-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경기 연천군은 강원 횡성군보다도 낙후
 - 수도권 규제에 더해 60여년간 군사 규제까지 받고 있기 때문
- 수도권 규제는 기업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로 작용
- 한국경제연구원이 2015년 수도권 기업 118곳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 수도권 62개 기업은 2009~2014년 수도권 규제 등으로 투자 시기를 놓쳐 3조 3329억원(미투자금액, 금융비용 등)의 경제적 손실
 - 이 과정에서 1만 2059명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 기회도 사라짐
 - 외국 기업이 한국 진출을 포기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음
- 해외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한국으로 유턴하는 데도 수도권 규제가 장애물이 되고 있음
 - 2013년 8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유턴기업지원법)이 제정돼 유턴기업은 조세 감면, 자금·입지·인력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수도권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유턴기업은 2014년 22개, 2016년 12개였지만 올해는 현재까지 7개에 불과
- 선진국들은 잇따라 수도권 규제를 풀어주는 추세
 - 일본은 2000년대 들어 ‘수도권 구시가지의 공장 설립에 관한 법’을 폐지하고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을 제정하면서 수도권 개발에 적극적
 - 영국은 1982년 수도권에 대한 공장개발허가제를 폐지한 데 이어 2000년대 들어서는 템스강 하구 지역을 성장주도지역으로 개발하는 ‘템스 게이트웨이 플랜’을 추진
 - 프랑스는 1982년 수도권에 공장을 신축할 때 과밀부담금을 매기는 ‘르드방스 규제’를 없앴음
-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한국만 수도권 규제를 고집하면서 스스로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에 한해서라도 수도권 규제를 풀어서 기업이 제대로 투자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함

2. 해외기업도 손든 규제의 벽... 수도권 일자리 1 만 2 천개 증발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기사	보도일자	2018.08.20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중부일보

02

주요내용

- MB 정부 수도권 규제완화 미흡... 공장 신·증설 투자 여전히 막혀
- 62 개사, 3 조 3 천억 경제적 손실... 한국 혁신지수 규제 세계 꼴찌 수준

- 경기도내 입지 규제 등으로 외국인투자가 해외로 역유출되는 상황들이 발생하자 2009 년 이명박 정부는 ‘10·30 수도권규제 완화조치’ 를 발표
- 당시 조치의 주요내용은 수도권에서 공장용도로 지정된 지역에서 기존공장 증설과 첨단업종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개선
- 2015 년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0·30 조치가 발표된 2009 년초 경기도의 실태조사 결과 수도권에 신·증설 투자 수요를 갖고있는 기업은 161 개사로, 투자규모는 15 조 4 천 311 억 원
- 하지만 전경련이 10·30 조치 이후 81 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수도권에 신·증설 투자가 가능하다는 응답은 43 개사·3 조 4 천 890 억 원에 불과했으며, 여전히 규제로 투자할 수 없다는 응답은 38 개사로 이들의 투자규모는 1 조 1 천 765 억 원
-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가 기업들이 체감할 수 없는 수준에 불과했다는 방증
 - 실제 한국경제연구원이 2009 년 10·30 조치 이후 2014 년까지 6 년간 수도권내 공장입지 투자계획 변동내역을 분석한 결과 118 개사 중 62 개사가 수도권규제 등으로 공장 신·증설 투자 타이밍을 놓쳤다고 답함
 -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3 조 3 천 329 억 원, 계획되었다가 사라진 일자리는 1 만 2 천 59 개로 집계
- 2017 년 우리나라의 규제환경은 전체 127 개국 중 61 위
 - 미국의 코벨대학과 프랑스 인시아드 (IMSEAD), 세계지적재산기구 (WIPO) 가 매년 혁신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의 경제적 요소와 국가 경제단위내 활동의 결과물로 얻은 요소를 지수화해 매년 발표하는 세계혁신지수
 - 혁신투입 5 개 부문 중 ‘제도’ 요인은 2016 년 31 위에서 35 위로 4 단계나 하락
- WEF(세계경제포럼) 의 ‘2017 년 글로벌 경쟁력 평가결과’ 에서도 우리나라는 제도요인 평가에서 전체 137 개국 중 58 위를 기록
- 아산나눔재단과 구글캠퍼스 서울이 2017 년 발표한 글로벌 100 대 혁신기업 소속 국가를 살펴보면 미국이 56 개사로 절반을 차지하고 중국 24 개, 영국 6 개, 독일 3 개 순이었지만, 한국기업은 전무
- 제 3 차 수도권정비계획이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제기
-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12 월 발표한 ‘수도권 정비계획의 실효성 평가와 향후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 12 명 (수도권 6 명·비수도권 4 명·국책연구원 2 명) 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제 3 차 수도권정비계획의 실효성을 평가한 결과 인구안정화 ‘미흡’ 이라는 평가결과
 - 당시 평가위원들은 ‘인구 증가세는 둔화됐으나, 인구 계층별 유입추이는 악화되고 있다’ ‘청년층 유입 등에 의해 인구 측면에서 수도권 집중이 심화됐다’ 등의 검토의견
- 1970 년 정부의 ‘수도권 인구의 과밀집중억제에 관한 기본지침’ 에서부터 시작된 수도권 정비계획의 근본적 목표인 인구 분배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목적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2. 해외기업도 손든 규제의 벽... 수도권 일자리 1만 2천개 증발

02

주요내용

- 제 3 차 수도권정비계획에 최초 도입된 '정비발전지구' 도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함
 - 수정법상 3 개 권역에 대한 규제를 예외적으로 완화해주는 지역인 정비발전지구 개념이 도입됐지만, 수도권경쟁력 강화에 대해서는 '중간' ,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은 '미흡' 하다는 평가
- 평가위원들은 검토의견
 - 일부 첨단산업 집적 등 성과는 있었으나, 수도권 규제로 인한 폐해가 발생
 - 당초 계획에 포함된 접경지역·자연보전권역내 업종제한, 대학입지, 대규모 개발사업의 규모제한 완화는 실현되지 않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
- 신산업 규제 완화도 수도권은 제외
- 이에 경기도는 최근 정부의 신산업 규제혁파 등 움직임에 맞춰 규제프리존특별법에 수도권을 포함하도록 요구해왔지만, 실현 여부는 미지수
- 지난 17 일 여야 3 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간 회동서 합의된 오는 30 일 규제프리존특별법 처리에 상정될 법안이 김경수 경남지사가 의원시절 발의한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 특례법과 이학재 의원이 발의한 규제프리존법안 등의 합의안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
 - 이들 법안에서 규제프리존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 개 시·도 지역에 27 개의 전략산업을 지정해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주고 세제지원을 해주는 것이 골자
- 최근 경기도는 1 천 500 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신사업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경우 5 천여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결과를 얻음
- 그러나 규제프리존으로 대표되는 신산업 규제혁신 법안에서 조차 수도권이 배제되며 실제 창출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

3. 비수도권 눈치보다가 '경제희생' 놓친다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기사	보도일자	2018.08.21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중부일보

02

주요내용

- '수도권 규제풀면 지방 망한다' 비수도권 정치인들 반대 여전... 기업은 지방이전 보다 해외로
- 정권 바뀌어도 관련법안 흐지부지... 문재인 정부 1년간 311건 규제개혁, 박근혜 정부의 39.8%에 그쳐

- 정치권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비수도권은 망한다는 이분법적 논리를 앞세워 여론호도에 나서는 모습도 여전
- 규제관련 각종 법안들은 비수도권의 강력 반대로 흐지부지 상태, 오히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대결구도가 고착화되는 양상으로까지 변모될 조짐
- 비수도권 출신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도권을 규제로 묶어두면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할 것이라는 논리
- 무한경쟁 시대에 기업의 자율성 보장보다 정부가 인위적인 제재를 가하고 나서면서 경제활성화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비판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노무현 정신' 등 이념적인 부분에 있어서만 강조하고 있을 뿐 실상 경제부분에 대해선 소극적인 모습
- 특히 집권 2년차를 맞이하여 '경제' 문제 해결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경제 희생의 단초가 될 수도 있는 수도권 규제에 관련해선 비수도권과 일부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의식한 듯 입을 다물고 있음
- 문 대통령은 규제개혁에 '올인' 하는 모양새,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에 대한 과감한 혁신을 주문하고 있다.
 - 매달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직접 주재, 1개의 과제를 선택해 해결책을 집중 모색
 - 지난 6월 열린 규제개혁 점검회의서는 해당 부처의 준비부족을 질타하면서 회의를 취소
- 지난 12일에는 청와대 발(發) '20개 핵심 규제개혁 과제'에 수도권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됐다는 한 언론 보도, 구체적인 세부 규제완화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
- 하지만 청와대는 즉각 강력 부인하고 나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사실무근" 이라고 밝힘
- 그러면서 수도권규제 문제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또다시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시행한 규제개혁 건수는 박근혜 정부의 연평균 규제개혁 건수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주장
- 역대 정부에서도 수도권 규제 완화 목소리는 계속됐지만 여론에 떠밀려 규제 완화 시늉

4. 규제 프리존에 경제자유구역 포함을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기사	보도일자	2018.08.23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기호일보

02

주요내용

■ 박남춘 인천시장 국회 찾아 여야 원내대표에 요구 방침
 ■ 공장 총량제 예외적 허용·의료·바이오 규제 완화 제안

-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을 규제 프리존에 포함시켜 줄 것을 정치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22 일 밝혔다
 - 박남춘 시장이 조만간 국회를 찾아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요구할 방침
 - 경제자유구역 취지가 규제를 풀어 주기 위함이니, 국내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 허용, 공장총량제 예외적 허용 등을 요청할 계획
- 또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전략 산업인 의료·바이오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도 제시
- 그동안 인천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묶여 500㎡ 이상의 대학, 공장 등을 신·증설하지 못하고 공장총량제도 적용
- 이 때문에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경제규제구역’ 이라고 불리기도 했음
-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올해부터 2020년까지 공장 신·증설 총량은 4만㎡로 아직 소진되지 않았음
 - 외국인 투자기업은 총량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 있음
 - 인천지역 전체 공장 신·증설 총량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55만㎡
 - 올해 공장 신·증설 총량은 24만2천㎡로 현재 30% 소진
 - 인천은 매년 공장 총량에서 평균 50% 정도 소진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06~2008년에만 81% 까지 소진
- 규제 프리존 특별법은 시·도별 지역 전략산업을 선정해 과감한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기업 투자와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취지
-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규제 프리존 특별법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
 - 2015년 12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별 지역 전략산업을 선정
 - 현재 부산은 해양관광·IoT 융합 도시기반서비스, 대구는 자율주행자동차·IoT 기반 웰니스산업이 선정되는 등 전국 14개 시·도의 17개 산업이 선정
- 허종식 균형발전부시장
 - 화재와 태풍 등 상황을 지켜보고 이번 주내로 시장이 직접 국회에 방문해 규제 완화에 대해 설명할 것
 -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 프리존이 맞긴 하지만 수도권에 유일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도 필요

1. 김영록 전남지사, 강원·호남·충청권인 '강호축' 국가계획 반영 서명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기사	보도일자	2018.08.14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노컷뉴스

02

주요내용

■ 전라선 고속철도 등 촉구… 시도지사협서 지역 균형발전 강조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4 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강원도와 호남·충청권인 '강호축 공동건의문 서명식' 과 '제 39 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 에 참석
- '강호축 공동건의문 서명식' 에는 충북, 광주, 대전, 세종, 충남, 전북, 전남, 강원 등 8 개 대상 시·도 가운데 6 개 시도지사가 참석해 공동건의문에 서명하고 강호축의 국가계획 반영 등에 한목소리를 냄
- 이번 건의문
 - 전라선 고속철도 (익산 ~ 여수), 광주 ~ 완도 (2 단계) 고속도로 건설 등을 포함해 시도별 핵심사업을 직접 명시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
- 이어 열린 제 39 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17 개 시·도 중 15 개 시도지사가 참석해 협의회 2018 년 업무보고와 지방분권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지방분권 등 공동현안에 대해 논의
 - 안건보고 및 논의 뒤에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회를 1년 동안 이끌어 갈 제 12 대 임원단 선출이 진행
- 이번 총회에서 김영록 도지사
 - 시·도 상생을 위한 시·도 간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며 협력 의지를 분명히 함
 - 지방분권 추진에 있어 지역 균형발전을 충분히 고려해 모든 시·도가 고르게 발전할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
 - 회의 안건과는 별개로 9 월 1 일부터 목포와 진도 일원에서 개최되는 '2018 전남 국제 수목 비엔날레' 에 대한 시도지사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

2. 광주 - 대구 잇는 ' 달빛내륙철도 ' 사업 속도 낸다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기사	보도일자	2018.08.20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연합뉴스

02

주요내용

■ 광주시는 오는 21 일 광주시청에서 ' 제 3 차 달빛내륙철도 경유지 지자체 실무자협의회 ' 를 20 일 개최

- 이번 협의회는 광주시와 대구시를 비롯해 담양·순창·남원·장수·함양·거창·합천·고령 등 경유지 10 개 지자체가 달빛내륙철도 건설 해법을 모색하고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
- 행사는 한국교통연구원 이호 박사가 달빛내륙철도의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비한 경제성 분석과 제 4 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 반영을 위한 논리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를 보고하고 협조사항을 공유
- 오는 9 월 3 일 '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국회포럼 ' 을 앞두고 포럼 개최 준비를 위한 지자체별 역할과 내년도 국비 10 억원 (사전 타당성 연구용역 조사비) 확보를 위한 대책 등을 논의
- 달빛내륙철도는 광주~대구 간 191.6 km 를 고속화 철도로 건설하는 6 조 3 천 87 억원 규모의 국책사업
 - 사업이 완료되면 시속 200·250km 속도로 광주·대구 간 1 시간 이내 주행이 가능
- 그동안 철도 교통인프라가 열악한 영호남 내륙도시가 연결돼 산업구조 연계 등 일자리 창출과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 특히 최근 남북 화해 분위기에 맞춰 남북철도와 달빛내륙철도를 연계한 남북 경제협력사업 전체효과를 제고해 영·호남까지 수혜지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광주시 관계자
 -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은 1 천 300 만 명 규모의 새로운 광역경제권을 구축해 지역 균형발전과 영호남 화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
 - 남북철도와 연계한 경제협력사업 확대와 국토균형개발로 국가 재도약의 계기로 작용하길 기대

3. 국가균형발전 위해 '강호축' 구축 역량 모은다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기사	보도일자	2018.08.20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충북일보

02

주요내용

■ 강원·충청·호남 8개 시·도가 '강호축'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합심한 가운데 해당 지역 균형발전·지방분권운동 연대기구들도 역량 결집

- 일명 '강호축지역연대'는 20일 국가균형발전 및 한반도통일시대를 조속히 실현하는 차원에서 '강호축의 설정 및 확충'을 국가계획에 적극 반영·실현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결의했다고 발표
 - 강호축이란 충북, 대전, 세종, 충남, 광주, 전북, 전남, 강원 등 중심이 된 강원~충청~호남을 연결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의미
- 강호축지역연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강호축 구축을 위해 총 5가지안을 결의
 - 강호축 연대에는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강원연대, 지방분권충남연대, 행정수도완성세종시민대책위원회, 전북지방분권협의회, 지방분권국민운동광주전남본부, 지방분권전남연대 등이 참여
- 주요 내용
 - 국가 계획에 '강호축의 설정 및 확충'을 반영
 - 강호축의 설정 및 확충을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 시 사람과 환경의 가치 우선 반영
 - 철저한 지역주도방식 채택
 - 강호축 추진체계에 지방분권·균형발전 시민사회단체 참여
 - 지속적인 공론화·대안제시 활동 전개 등
- 앞서 이시종 충북지사를 비롯한 8개 시·도지사는 지난 1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가계획에 강호축 반영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
 - 충북은 강호축 교통망 구축을 위한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청주공항~제천, 시속 120→230km)과 오송 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핵심사업으로 담음
- 강호축지역연대
 - 결의된 사안은 강호축 해당 지역 광역시·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청와대, 국회 등 유관기관에 전달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국토종합계획 등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할 것
 -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공론화 및 대안 제시 활동을 전개
 - 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18~2022년)은 현재 시도계획 및 부문별 계획 작성 중으로, 올해 11월까지 대통령 승인으로 확정
 - 5차 국토종합계획(2021·2040년)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를 선도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국토교통부가 주관해 내년 10월까지 수립을 마무리